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Vol.35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②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③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합니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고,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④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여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합니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열분해유,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환경인증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규제준수 지원 등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첨1][보도자료] 220826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방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 9. 5.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의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①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며, 기타 인센티브 확충, 재정지원 확대 및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②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여 배터리가 전기차와 독자 유통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터리 제작-등록-운행, 탈거, 재활용 등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공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2-1][보도자료] 220905 환경부 –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별첨2-2] 0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별첨2-3] 02. 김태윤 TF 공동팀장 모두발언

[별첨2-4] 03.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별첨2-5] 04.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되고 있는데,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②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인데,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③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④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하므로,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첨3][보도자료] 220829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번 달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PPA 제도

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도 허용됩니다.

[별첨4][보도자료] 220831 산업통상자원부 –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연료전지까지 포함한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이 기업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RE100을 포괄하는 CF10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CF100은 원전과 연료전지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는 캠페인으로 구글과 UN에너지, UN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SE4ALL) 등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업계에선 CF100에 대한 인증제도가 구체화되면 RE100보다 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도 무탄소 전원 사용을 인증해줘서 기업이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공단 같은 정부 기관에서 CF100을 인증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비중 높인 韓, '힘겨운' RE100 대신 '현실적' CF100 뜬다 (머니투데이, 9월 6일자 보도)

2. 탄소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일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ICE에 따르면 유럽탄소배출권(EUA)의 t당 선물 가격은 이달 2일 기준 77유로를 기록했는데, 열흘 전 100유로 근처까지 폭등한 배출권 가격은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의 변동성이 커진 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 대해 변칙적으로 가스 공급 제한을 발표하고 있고, 가스 공급 제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가나 기업의 불확실성이 과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향후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이 이어진다면 한국에서도 배출권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널뛰는 가격에 거래 중단 요구…흔들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한국경제, 9월 4일자 보도)

3.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공동으로 '2022년 동반성장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EU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비한 동반성장과 ESG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반성장과 ESG의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기업 등이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의 인권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제발표에서 문두철 연세대 교수는 "공급망 실사가 글로벌 ESG의 쟁점이 되면서 대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 간 협력의 전제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과 성과의 공정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와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ESG 경영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비…동반성장 필수 조건으로" (뉴스1, 9월 1일자 보도)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ECC에서 ESG 및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ESG 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들이 ESG 펀드를 공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당국은 고객에게 설명한 대로 ESG 금융상품을 운용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강력한 감독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금감원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감독원칙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ESG 워싱' 적극 대처…공시방안 고민" (뉴시스, 8월 31일자 보도)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2022년 Vol.3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H. www.draju.com